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러시아 · 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shjeh@kiep.go.kr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러시아 · 유라시아팀 연구원
jymin@kiep.go.kr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러시아 · 유라시아팀 연구원
bgkang@kiep.go.kr

세르게이 루코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rgeylukonin@mail.ru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극동·바이칼 지역’은 러시아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너머 태평양에 이르는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주변 지역을 포괄함.
 -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을 채택하고, 2014년 4월 다시 이를 전면 개정함.
- 최근 국내에서도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해당 지역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방 3각 협력(남·북·러)과 유라시아 협력의 지리적 연결고리임.
 - 전문가들도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계획을 신흥지역 진출 확대를 통한 한국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지적하고 있음.
-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바이칼 지역은 유라시아 협력의 우선적 대상지역임.
 - 지난 2013년 10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발표함.
 - 제1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2014.12.10)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부처합동)’이 의결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본격적인 이행단계가 시작됨.
- 이 연구의 목적은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러 경제협력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극동·바이칼 지역의 상황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 지정학적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은 전략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동북아와 인접한 안보적 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과정에 연루시키는 연결고리임.
- 지경학적 측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아태지역과 인접한 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임.
-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은 러시아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지정·지경학적 의미가 있음.
 - 첫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강대국 지위를 강화하고, 러시아 전체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음.
 -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영토 밖의 신 성장 공간 조성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 따라서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은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 호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한 대응방안 모색은 우리에게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표 1. 극동·바이칼 지역의 특징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지정학적 측면	지경학적 측면
극동·바이칼 지역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동북아와 인접한 안보적 취약지대 - 러시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과정에 연루시키는 연결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 아태지역과 인접한 저발전지대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의 의미: 러시아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강대국 지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전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의 의미: 한국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밖의 새로운 성장 공간 조성 가능성 제공

자료: 저자 작성.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정책

-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면, 크게 ‘계획(프로그램)’ 차원과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계획(프로그램) 차원

- 2009년 확정된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에 기초하면서도, 2013년 3월 확정되고 2014년 4월 전면 개정된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되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하부 프로그램(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균형발전 조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이 수행되고 있음.

2)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

- 극동개발부 설립과 권한 확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등 연방 거버넌스가 변화됨.
- 기존에 설립된 (주)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펀드 외에 (주)달니 보스토크, 극동 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 설립 등 극동 개발 관련 기구가 설립됨.
- 조세특혜법 제정,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조성,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 기간 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 조성 등 특혜적 법·제도가 도입됨.
-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로 규정될 수 있음.
 -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추격형 발전’이 아닌 극동·바이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지향형 산업 발전 및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 계획의 수행력 강화를 위해 연방 거버넌스를 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함.

-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적절한 연방예산 확보 계획이 마련됨.
- 넷째,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 개발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선언됨.
-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은 연방정부령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리라는 점임.

표 2.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정책: 계획 및 제도적 메커니즘

계획(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2009년 확정) -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2013년 확정, 2014년 전면 개정) 및 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균형발전 조치’(2014년 확정) -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2013년 확정) -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20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2006년 확정) 	
제도적 메커니즘	연방 거버넌스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개발부(2012년 설립, 2013년 권한 확대) -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2013년)
	극동 개발 관련 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달니 보스토크(설립 예정): 선도개발구역 조성 및 운영 - 극동 투자유치·수출지원청(설립 예정): 투자 및 대외경제협력 촉진 - 인적자본개발청(설립 예정): 이주민 교육 및 유치 -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펀드(2011년 설립): 프로젝트 투자 참여
	특혜적 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혜법 제정(2014년 발효) -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2014년 말까지 연방법 제정 예정) -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2014년에 2025년까지로 기간 연장 결정) -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2014년 조성 결정)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주요 협력분야

1)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내 반제품(半製品) 또는 부속품 생산

- 러시아는 극동·바이칼 지역(티바 공화국 포함)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특혜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특혜도 제공하는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을 극동에 조성하고자 함.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 이러한 특혜를 최대한 활용하여 반제품이나 부속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여 완제품(完製品)을 생산하는 새로운 역내 분업을 구상해볼 수 있음.
 - 이는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정책에도 부합하는데, 3기 푸틴 정부는 호의적 투자환경 조성으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 제조업 기업들을 유치하여,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지향형 산업

육성과 극동 경제의 아태지역 가치사슬(Value Chain) 편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임.

- 여기서 관건은 러시아 정부의 조세특혜가 극동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상쇄할 수 있느냐와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 생산하는 반제품이나 부속품의 수출을 위한 물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임.

● 따라서 극동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이러한 방식의 생산이 가능한 상품과 이에 적합한 생산시설의 입지를 찾아야 할 것임.

- 특히, 생산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이나 산업-물류에 특화되고 한반도에서 가까운 항만 인근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중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하바롭스크 변강에 위치한 ‘바니노-소베츠크-가반스키’, 프리모리예 변강에 위치한 ‘자루비노’ 등임.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은 아니지만, 사실상 자동차 제조업에 특화된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2) 석유·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

● 여전히 극동·바이칼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채굴업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의 전통적인 유망 산업 역시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가스 생산과 가공 산업임.

- 러시아 정부도 이러한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송유관과 가스관을 건설하면서 아태지역을 향한 효율적인 에너지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한편으로 러시아 정부는 원료 상태의 수출은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에너지 자원의 ‘심층가공’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가 잘 보여주듯이, 석유·가스 가공 플랜트는 아태지역을 향한 에너지 수출 확대의 핵심기반임.

● 한국은 석유·가스 가공 기술과 플랜트 건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 극동·바이칼 지역에서 소련 시절 건설된 석유·가스 플랜트의 현대화와 새로운 플랜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

- 현재 극동의 석유 가공 플랜트 부족으로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러시아 정부가 아시아 국가로부터 역수입까지 검토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초기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의 경우처럼, 가스프롬과 같은 공기업과 합작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3)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그동안 러시아 경제 성장의 견인차는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이었음.
 -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카잔 유니버시아드, 소치 동계올림픽 등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의 종료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많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러시아는 일자리 창출에 용이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또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
- 2014년 4월 개정된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의 골자도 해당 지역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있음.
 - 하지만 2014년 3월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연방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어, 극동·바이칼 지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이 유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지만, 대러 제재로 인해 서방의 투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러시아 인프라 건설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항만 인프라 현대화의 경우, 기술과 경험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TSR, BAM 등 철도 현대화 및 도로 건설·개보수 관련 핵심기술과 부속품 판매, 건설 중장비 수출 등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러시아 공기업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업임.

4)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 TSR-TKR 연결, 남·북·러 가스관 건설, 전력계통망 연계 등 이른바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북한이라는 ‘물리적 장애물’의 극복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교통·물류 흐름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므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러시아는 북한의 대소련 채무 탕감 관련 협정 비준, 교역대금의 루블화 결제, 나진-하산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임.
-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상업적 성공은 TSR-TKR 연결 사업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임.
 -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컨소시엄의 지분 인수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부산이나 동해 지역 항만에서 나진항까지의 해상운송과 TSR을 통한 육상운송을 결합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정치적 리스크, 즉 ‘신뢰의 부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남·북·러 가스관 건설, 전력계통망 연계, 더 나아가 농업 협력 등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임.

나. 지원방안

1)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

- 양국 총리회담을 정례화하고,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총리회담 준비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공동위의 러시아 측 수석대표를 장관급(극동개발부 장관)에서 부총리급(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으로 격상하여 위상을 재정립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과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적기임.
 - 2013년 가을 극동개발부의 권한 확대, 즉 3기 푸틴 정부가 극동개발부에 극동 개발의 전권과 조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창구가 통일됨.
 - 최근 지역개발부 폐지 결정으로 인해 극동개발부의 위상이 제고되고, 권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푸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갈루시카 장관은 재계 출신 인사들을 극동개발부 요직에 대거 기용하면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분산, 러시아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한 피상적 분석, 연계진출 방안 부재, 정부 부처간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변화가 불가피함.
 - 이러한 전담기구는 2013년 가을 이후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전략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한·러 협력의 마스터플랜과 이에 부합하는 단계적 액션플랜도 마련해야 할 것임.

2) 민관협력(PPP) 사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모색

- 민관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목록을 요청하고, 한국 기업의 타당성 조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민관협력 사업과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조성에 관련된 연방법을 2014년 말까지 제정할 계획임.
 - 최근 세레이킨 극동개발부 차관은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내 제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곳으로 연결되는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을 약속한 바 있음.
- 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관련 예산을 통합·조정하여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해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기관은 많으나 자금 지원 규모가 전체 사업비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만일 예산의 통합·조정이 어렵다면 그와 별도로 GIF(Global Infra Fund)의 이자율 인하 등 다른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와 관련해서는 민간기관 등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들의 업종별 공동 타당성 조사를 조직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3) 투·융자 플랫폼, 해외금융, 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관련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3년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투·융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앞서 언급한 한국 기업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진출 유망 지역과 항만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함.

● 투·융자 플랫폼의 운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해외금융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 기업들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건설 수요로 인해 해외진출에 소극적인 바, 한국과 일본 국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이 제3국 EPC 기업의 서브컨트랙터(subcontractor)로 진출하는 방안도 가능함.

- 이는 러시아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신용도만 아니라, 자산 규모, 네트워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미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럽, 터키 등 제3국 기업들과의 연계 진출이 주효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차원에서 KOTRA 등 유관기관이 프로젝트 발주자인 러시아 지방정부와 공기업들, 유럽의 EPC 기업들, 한국의 EPC 기업들, 그리고 해외금융기관간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할 것을 제안함.

● 민간 파이낸싱을 이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 최근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극동의 리스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지멘스 파이낸스(Siemens Finance)를 이용한 현지 의료장비 시장 진출을 제안한 바 있음.

- 리스크가 큰 시장일 경우, 민간 파이낸스를 활용하면 작은 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정보제공방식의 개선

● 러시아 시장, 특히 극동·바이칼 지역의 경우 여전히 충분한 정보와 인맥 없이는 비즈니스가 자유롭지 않음.

-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양국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조직하여 독자적인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시장정보 입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 진출, 국내 또는 현지 컨설팅 기업과의 협력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포럼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터넷을 통한 현지 시장정보 제공에서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

- 여러 기관의 중복 정보 제공으로 인해 해당 기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많으며, 검색 시 쏟아지는 다량의 과거 정보 속에서 최신 정보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1)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 정보수용자를 세분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2) 기존 게시판 형식에서 키워드 입력 시 최신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3)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관련 법·계획(프로그램)의 신속한 번역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보제공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5) 다자협력 추진

● 다자협력은 특히 제조업의 경우, 역내 분업을 통해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을 가치사슬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극동·바이칼 지역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음.

- 다자협력은 러시아 측의 합의 위반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어느 한 국가에 대한 특혜 제공 시비(是非)나 경제적 의존도 증가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대규모 인프라 건설의 경우에도 한국 단독으로 수주·건설이 어려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러시아 시장의 경험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미 이러한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동시베리아·극동 개발 관련 6개국(한국, 러시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중국, 일본) 국책연구기관간 연구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컨소시엄은 2013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2014년 봄에는 모스크바에서 고위급 정책대화(Policy Dialogue)도 개최한 바 있음.
- 현재는 국책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차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6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점차 비즈니스 영역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6) 유라시아 국제협력 관련 한·중·러 3개국 공동연구 사업 추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에서 접점을 갖고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한·중 양국의 관심도 커지고 있음.

-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특히 서방의 대러 제재 아래서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라시아 교통·물류·에너지·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놓고 양국의 미묘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는 자신의 지정·지경학적 지위에 기초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구상을 고려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방향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함.
 - 특히 중국이 극동·바이칼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해당 지역 개발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따라서 유라시아 국제협력에 관한 3국의 구상과 협력을 주제로 한국, 중국, 러시아 전문가들 간 공동연구 사업 추진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함.

표 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주요 협력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내 반제품(半製品) 또는 부속품 생산 - 석유·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 -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 - 민관협력(PPP) 사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모색 - 투·융자 플랫폼, 해외금융, 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 정보제공방식의 개선 - 다자협력 추진 - 유라시아 국제협력 관련 한·중·러 3개국 공동연구 사업 추진

자료: 저자 작성.